

오늘의 주요기사

2023 1 12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江原日報		[]			1	
강원도민일보		“		”	2	
MTN  머니투데이방송			, '2023	' [...	3	
MTN  머니투데이방송			, '2023	' [...	4	
江原日報	10	"	.	"	5	
강원도민일보	09	"		"	5	
江原日報					6	
江原日報				7	
江原日報				8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	'	9	
					10	
신아일보		2			11	
강원도민일보	13		.		11	
			, 2023		12	
 춘천MBC		,	"	!	"	13
노컷뉴스		"	"	'	' [1/2]	14
노컷뉴스		"	"	'	' [2/2]	15
강원도민일보	01					16
강원도민일보	05		2	... " 가	" ...	16
강원도민일보	01	'	.	'	,	17
江原日報	01		.			17
강원도민일보	11					18
강원도민일보	12		4			18
강원도민일보	19	[]		,		19
江原日報	19	[]		,	'	20

江原日報

[강원포럼]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역량 집중

권혁열 도의장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화합니다. 출범목적은 규제혁파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시 말해, 도민이 살기 좋은 곳, 기업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는 강화된 자치권을 통해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와 지역소멸 위기를 앞둔 강원도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출범에 맞춰 도의회와 강원도, 정부에선 도와 시군 실정에 맞는 특례안 발굴에 총력을 다 한 덕분에,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규제사항에 대한 특례를 포함, 181개 조항으로 구성된 입법안을 마련했으며, 다가올 4월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제11대 의회 개원 후 지난 6개월 간 시군 의회 순회를 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등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특례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소통해왔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를 비롯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9조 시대를 열어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이 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정책지원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 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강원도에 더 나은 성장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이자 광역 기초가 공존하는 최초 내륙형 특자도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전북특자도 법안이 지난 12월 1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였고, 경기충북까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 경쟁으로 특별자치의 특별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만의 가치를 살려 차별화된 특별자치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도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기대에 부응키 위해 의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치열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의회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자주재정권 확보, 효과적인 의회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반쪽짜리 인사권을 보완할 조직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도와 협력하여 과감한 세제혜택 마련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강원도가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업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겠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유출, 구직난에 따른 결혼감소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발굴하고, 인구소멸 대응전략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으로 향후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정비 등 채워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도의회는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온전하고 성숙한 정치로 도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3년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에도 도민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일보

“성평등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강원여성 연대를”

강주영

도 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
 성별 갈등 해소·폭력 예방 다짐
 축시 낭독·축하 공연 이어져



▲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금순)신년인사회가 11일 춘천 ORA호텔 베어스 컨벤션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과 18개 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여성계가 성평등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힘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금순)는 11일 춘천 ORA호텔 베어스 컨벤션홀에서 2023 강원 여성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전금순 도여성단체협의회장과 도단위 여성단체장, 18개 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회 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 부인 원현순 씨, 신경호 교육감 부인 한미숙씨 등 도내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부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대규모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별간 갈등 해소와 성차별 없는 육아문화, 폭력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정희·엄연옥 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은 21세기 남녀평등한장 낭독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과 임금 차별 등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여성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고 성별과 상관없이 양육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연대하자”고 다짐했다.

전금순 회장은 “세대와 성별간 인식 격차를 줄여 젠더폭력을 없애고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민현 부사장은 “더욱 높아지는 강원여성의 위상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영

juyo9642@kado.net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2023 강원여성 신년 인사회' 개최



(사진=박시은기자)11일 춘천오라호텔베어스 컨벤션홀에서 '2023 강원여성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 강원여성 신년인사회'가 11일 춘천오라호텔베어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더보이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2022 활동영상을 시청했다.

주요 참여 내빈으로는 김진태 도지사 내외,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강원도의회 정재웅의원, 유순옥의원, 농협강원지역본부 김용욱 본부장,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이건설 회장 등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임회장 9명도 참석했다.

이어 21세기 남녀평등현장의 낭독과 각 단체장 새해인사도 진행했다.



(사진=박시은기자)11일 여성단체협의회 각 단체장이 새해인사를 하고 있다.

신년사에서 전금순 회장은 “올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청소년의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게 각 지역의 분야에서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지역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지역의 곳곳의 취약한 부분을 살피겠다. 함께 손잡고 우리 여성 단체회원들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축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5개월 남았다. 강원도민의 절반인 여성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빈의 새해 축사와 축시, 축하떡 나눔행사,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는 1974년 4월 20일 설립했으며 설립목적은 여성단체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도모, 회원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회원단체 발전, 건전가정 육성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국가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다.

박시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江原日報

“춘천 우수국제학교·영어교육도시 설립”

강북지역 주민들 균형발전 토론회서 시·도에 건의키로 소양8교 건설·북춘천역 신설·공공기관 유치도 촉구

【춘천】강북지역 주민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우수국제학교 및 영어교육도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양8교 조기 건설, 북춘천역 신설, 제2 공병여단 이전을 비롯한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을 강원도와 춘천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주민 토론회가 11일 북춘천새마을금고 4층 강당에서 신영

길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장, 박찬홍·양숙희 강원도의원, 김용갑·권희영·지승민 춘천시의원, 김선호 북춘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신순남 신사우동장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도청 강북 추진위원회는 총열로 83 일원 40만㎡에 우수국제학교 및 영어교육도시 설립을 도와시, 도교육청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춘천 강북지역에는 인문계고가 하나도 없다. 이어 주민들은 강북지역이 도청사 신축 이전 최종 후보지 2곳에 포함됐지만 접근성과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청 유치를 하지 못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로 민선 8기 도지사과 시장 임기 내 소양8교 건설과 북춘천역 신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도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도교육청의 동반 이전 움직임과 함께 도소방본부 등의 구도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역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도청 이전 기대효과에 상응하는 지역개발과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주민은 “동면에는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동내면에는 다원지구와 도청사이전, 캄프페이지에는 첨단지식산업 관련 공간 마련 등을 비롯해 의암호 마리나리조트, 국가호수정원 등 강남지역에는 각종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강북지역에는 어떠한 개발계획

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밖에 춘천의료원 건립, 전국의 군인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전군아파트 유치, 강원특수교육원 유치, 옛 도농업기술원 부지에 시니어타운종합물조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신영길 도청 강북추진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도교육감과 면담을 진행, 대책을 먼저 듣고 주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강북 문화예술공간 보다 경제개발 우선해야”

도청강북추진위 주민토론회 부지 탈락지역 활용방안 모색 문화시설 조성 ‘사탕발림’ 지적 강북역 등 인프라 확충 강조



강원도청강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주민 토론회가 11일 북춘천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렸다.

속보=춘천시가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로 선정되지 못한 우수동 농업기술원 부지에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본지 1월 4일자 13면)한 가운데 강북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담보되는 개발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강원도청강북추진위원회(위원장 신영길)는 11일 북춘천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말 도청사 신축부지가 동내면 고은리로 결정된 이후 처음 주민들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춘천시가 계획한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에 앞서 강북역 추진 등 인프라

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춘천시는 옛 농업기술원 부지(20만㎡)에 북부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을 이전해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 공연장과 전시장을 겸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준해 신북읍시장협의회장은 “문화라는 것은 어느정도 경제발전

이 됐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문화 시설이나 공원 만들어놨다고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번듯한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북역을 놓는 방안이나 소양8교도 현 시정의 임기 안에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홍 도의원은 “고속전철역을 새로 세우기 보다는 일반전철의 연장선으로 강북역이 조성돼 이동이 용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정주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수동 코아루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춘천에서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집값이 저렴한 강북으로 들어왔다 아이가 크면 다시 빚을 내서라도 강남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강남 일대에 인문계고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가국방벤처센터 유치에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북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종혁 주민자치위원은 “옥산포 지역에 군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를 군인가족도 함께 살 수 있는 전군아파트화 한다면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군인 한 명만 이전하는 것은 경제효과가 없다. 가족들도 함께 춘천에서 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길 추진위원장은 “도청사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 시에 의견을 전달해보겠다”고 했다. 이승은

江原日報

춘천 강북지역에 우두국제 학교 및 영어교육도시 설립 추진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주민 토론회 11일 열려
주민들, 소양8교 조기 건설, 북춘천역 신설, 제2공병여단 이전 등 제안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주민 토론회가 11일 북춘천새마을금고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춘천 강북지역 주민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우두국제학교 및 영어교육도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양8교 조기 건설, 북춘천역 신설, 제2공병여단 이전을 비롯한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을 강원도와 춘천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주민 토론회가 11일 북춘천새마을금고 4층 강당에서 신영길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장, 박찬홍, 양숙희 강원도의원, 김용갑, 권희영, 지승민 춘천시의원, 김선호 북춘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신순남 신사우동장 등을 비롯해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도청 강북 추진위원회는 총액로 83억원에 40만㎡에 우두국제학교 및 영어교육도시 설립을 도와 시, 도교육청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춘천 강북지역에는 인문계고교가 하나도 없다.

이어 주민들은 강북지역이 도청사 신축 이전 최종 후보지 2곳에 포함됐지만 접근성과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청 유치에 불응할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로 민선 8기 도지사과 시장 임기 내 소양8교 건설과 북춘천역 신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도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도교육청의 동반 이전 움직임과 함께 도소방본부 등의 구 도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역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도청 이전 기대효과에 상응하는 지역개발과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주민은 동면에는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동내면에는 다원지구와 도청사 이전, 캠프페이지에는 첨단지식산업 관련 공간 마련 등을 비롯해 의암호 마리나리조트, 국가호수정원 등 강남지역에는 각종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강북지역에는 어떠한 개발계획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밖에 춘천의료원 건립, 전국의 군인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전군아파트 유치, 강원특수교육원 유치, 옛 도농업기술원 부지에 시니어타운종합몰 조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신영길 도청 강북추진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도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해 대책을 먼저 듣고 주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절차상의 의혹 등을 밝히기로 했다.

江原日報

고용안정 도움주는 제도 왜 없애나 ...불만 쏟아내는 경제계

道,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 올해부터 운영 중단
근로자.기업.지자체 공동 적립 목돈 마련 지원
최소 5년 고용 안정 효과에 3,700업체 가입
경제계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입장

코로나19로 어려울수록
기업, 근로자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누가 가입하나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어떤 상품인가요?

근로자: 월 15만원 총 900만원
기업: 월 15만원 총 900만원
강원도 시군: 월 20만원 총 1,200만원

연 최대 5년 근무 근로자 수를
900만원 납부도 총 3,000만원 수렴

일자리안심공제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해 5년간 추진돼 온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의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중단되자 강원도내 경제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가 최대 화두인 강원도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의견 수렴 없이 폐지했다며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23 01 12 ()

江原日報

강원도는 2017년부터 근로자와 기업, 도 및 시·군 등이 공동으로 월 50만원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액 전액인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당초 목표인 5년간 1만여명 모집 목표를 채웠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지역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들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면서 안착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일자리안심공제에 가입한 직원들의 퇴사율이 줄어든데다 지난해 8월에는 첫 만기 가입자에게 3,000만원이 지급되면서 11일 현재까지 3,786개 기업의 8,710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좋은 정책으로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젊은 층의 고용을 안정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그동안 자치단체에 신규 가입 유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박재희 강원청년경제단체연합회장도 "경영에 부담되기는 하지만 일 잘 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이 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 결정 전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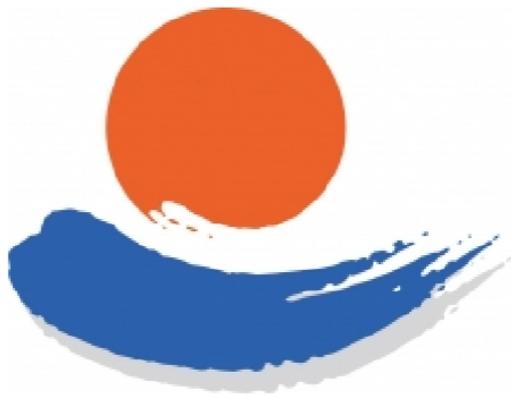
오히려 제주도는 안심공제와 비슷하게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의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유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내일채움공제를 유지 및 확대했다.

박윤미 도의원은 "안심공제 재개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일자리 안심공제를 유지해 정부의 내일채움공제가 챙기지 못한 근로자들은 강원도와 시·군이 안심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자리안심공제 신규 접수는 중단하지만 비슷한 공약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릉시 성덕동, '소외계층 난방용 주유권' 전달

(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강릉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 입암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임반디)는 지난 10일 성덕동주민센터 (동장 박인순)를 방문하여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마련한 난방용 주유권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입주민인 김용래 도의원,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윤식 소장도 함께 참석하여, “입주민 일동이 마련한 성금으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인순 성덕동장은 “어려운 살림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연탄에서 기름보일러로 교체만 했을 뿐 실제 냉방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찾아다니며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홍천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박홍숙 회장 취임

홍천 여성의용소방대 소통과 민·관 소방안전망 강화 ‘노력’



강원 홍천소방서(서장 허강영)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11일 홍천크리스탈웨딩홀에서 박홍숙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장의 연합회장 취임 및 영귀미(대장 김순례)·북방(대장 장애화)·내면(대장 김남순) 여성의용소대장의 합동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날 취임식에는 허강영 홍천소방서장과 10개읍·면 24개 남·여의용소방대장 및 임원, 신영재 홍천군수, 홍성기·이영욱 강원도의회의원, 박영록 홍천군의회의장과 의원,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순석 회장과 김두남 사무처장 및 조남순 사무차장,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박용근 홍천군자원봉사센터장 등 200여명의 각계 단체에서 참석해 축하했다.

신임 박홍숙 회장은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방안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화재예방 홍보와 방역소독은 물론 소방 및 복지사각지대 현장을 누비며 역동적 활동을 펼친 추진력과 화합의 리더십은 남다른 강점으로 꼽힌다.

박 회장은 “읍·면 각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소통 협력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안전으로 함께 동행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민·관 소방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보장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 여성의용소방대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감사하고 박홍숙 회장의 역동적 활동이 지역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강영 홍천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본연의 임무가 체계적으로 자리매김되어 홍천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용소방대로 거듭 발전할 것”이라고 축하했다.

(kms0884@hanmail.net)

신아일보

제2회 흥천군기독교 조찬모임회

조덕경 기자



제2회 흥천군기독교 조찬모임회가 11일 오전 6시 30분 흥천군청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2회 흥천군기독교 조찬모임회가 11일 오전 6시 30분 흥천군청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군수, 박영록 군의장, 이영욱 도의원, 최이경 부의장, 송우식 회장, 용준식, 김광수, 이광재, 용준순, 황경화, 나기호 군의원 등 흥천관내 기독교 목회자가 참석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강원도민일보



평창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평창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신임 의용소방대장 합동이·취임식이 11일 소방서회의실에서 심재국 군수, 김용한 소방서장, 지광천 도의원과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유영숙 연합회장 후임으로 박미순 씨가 취임하는 등 7명의 신임대장이 취임했다.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2023 신년인사회

- 최계숙 회장“여성 역량 하나로 모아 철원 발전 주춧돌 될 것”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계숙)는 10일 철원군 평생학습관 강당(갈말읍 소재)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협 회원 및 이현종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김정수 도의원, 엄기호 도의원, 박기준 군의장 등 각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흥의열 사회로 시작됐다. 개회선언,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와 여협 활동 영상이 이어졌다. 이애숙 여성단체부회장과 김상혁 4H회장이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을 낭독했고, 서인영, 안정미, 유옥희에게 재직기념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최계숙 회장은“여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철원군 발전에 주춧돌이 되는 15개 단체들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아동과 여성들이 행복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사)고향생각주부모임 철원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철원군연합회, 대한미용사협회 철원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연합회, 철원군사회복지도우미회, 철원군새마을부녀회, 철원군생활개선연합회, (사)아이코리아 철원지회, 철원군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철원군협의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철원군지회, 철원군재향군인 여성회, 철원군 청소년어머니 선도위원회, 한국여성예림회 철원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철원지회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민주당, "오직 민생! 내년 총선 승리"

◀ A N C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열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 때 뚝뚝 뭉쳐야 한다며 오직 민생 정치로 민심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V C R ▶

민주당 당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열린 신년 인사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극복 방안으로 도민들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이 연대의 끈기와 함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내년을 설계해 나가는 올해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당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총선 승리도 다짐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2명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완패를 반성한다며 민생 우선 정치로 도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의 구호도 '오직 민생'입니다.

[허영/국회의원]

"실질적인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민생 대안 정당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노무현 정권의 혁신도시 등을 거론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 달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송기현/국회의원]

"강원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균형 발전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에 민주당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지영·정찬성/강원도의회 의원]

"오직 민생! 오직 강원! 민생 제일주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비전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 E N D ▶ (영상취재/이인환)

백승호
bsh@chmbc.co.kr

노컷뉴스

"강원도 뜨겠다" 플라이강원 경영난 처방 '역풍' 자초

핵심요약

경영난-강원도 지원 감소 이유, 이사회 '모기지 공항변경, 사명교체' 검토
 강원도 "특정기업 지원 시장경제원리 위배, 이천시 지원금 회수" 강경 대응
 시민단체 "전형적인 '먹튀' '떼쓰기'...구상권 청구 검토해야"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모기지공항에 맞는 지원책 절실, 극단적 결론 막겠다"



2019년 9월 열린 플라이강원 1호기 도입 인수 행사. 강원도 제공
 적극적인 강원도 행, 재정 지원 속에 2019년 면허를 취득하고 취항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모기지 공항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원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안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지는 등 '역풍'이 일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모기지 공항변경과 사명교체를 검토하는 안을 3월 정기주
 주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 가중과 강원도 지원이 감소하는 상
 황에서 모기지를 옮겨 활로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강원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운항관련 재정지원금은 2019년 9억 9천만원을 시작으로 2019
 년 75억원, 2021년 60억원 등 144억 9천만원을 지출했고 올해 12억원 예산을 세워 놓은 상
 황이다. 이 가운데 2019년, 2021년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사 초기 안정을 위해 '선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제공했다.

화물터미널 등 항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307억원과 자부담 84억 9천만
 원을 포함 391억 9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플라이강원의 지난해 9월 기준 총 자산은 248억원, 총 부채 367억원, 영업이익은 -
 214억원으로 총 자산보다 총 부채가 119억원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파악됐다. 월 평균
 지출액은 급여, 항공유, 항공기 임차금 등 41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플라이강원측은 월 평
 균 지출액을 70억원선으로 밝혔다.

노컷뉴스

플라이강원 이사회 내부 의견에 대해 강원도와 일부 강원도의원들, 시민단체 반응은 싸늘하다.

강원도 집행부 안에서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운항장려금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전을 검토하려면 운항장려금부터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가 지원 요구에도 "기본적으로 플라이강원은 민간기업이다. 특정 민간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계속 밀빠진 독에 물만 부을 수는 없다. 특단의 자구책부터 찾으라"고 반응했다.

집행부 안에서는 모기지 공항 이전 시 재정지원금 정산 잔액 환수, 2027년 10월 29일까지 연장된 모기지항공사 유지기간 연장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항공인프라 구축사업 중단 등 불이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회 한 다선 의원은 양양지역 여론과 도의원을 의식해 이명을 요구했지만 플라이강원 이사회 의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원도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는 경제위기 속에서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은 민간기업이 고통분담과 자구책 모색은 뒤로하고, 자신들을 물심양면 도와준 강원도민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관련 부서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플라이강원 이사회 내부의 모기지 공항변경 검토를 '먹튀'로 규정했다.

연구소는 "플라이강원은 2019년 취항 이후 3년 넘게 강원도의 막대한 도민 혈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자구노력은 게을리한 채 때만 되면 지원금을 더 달라는 때쓰기를 넘어 이젠 짐을 싸서 떠나겠다는 겁박으로 지원금을 더 타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는 "지난 도정과 도의회에서 플라이강원의 재무 상태와 사업 수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묻지마식 지원에만 나선 책임도 있다. 현 도정과 도의회에서는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지원금 대비 효과 분석,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강원도 양양 모기지 항공사로서 다각적인 자구책을 모색하고 도민할인 등 공공성을 강화해왔다고 자부한다"며 "비모기지 항공사에 준해 감소한 지원책만으로는 타 공항에 비해 유류비 등 지출 요소가 많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표로서 바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재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플라이강원 회생을 위한 행정 지원책이라도 모색돼 극단적인 결론을 막는 것"이라며 "절충점을 찾도록 이사회와 강원도 사이에서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오는 17일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주원석 대표와 함께 플라이강원 경영 상황 진단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강원도민일보

플라이강원 보유 항공기 부족 면허박탈 위기

강원도-양양군 17일 3자 대면
모기지 이전 등 관련 대책회의

속보=플라이강원이 모기지 이전 검토 등에 나서 파장(본지 1월10일자 1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플라이강원, 양양군이 오는 17일 삼자대면을 갖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일각에선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각 관계기관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와 양양군, 플라이강원은 오는 17일 양양군청에서 정광열 도경제부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주원석 플라이강원대표이

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는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반기 기준 △자본금 150억원 △자본총계 -53억원 △부채총계 271억원 등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빠지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보잉 737-800 등 항공기를 조기 반납한 상태여서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박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항공사업법상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항공사는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 보유항공기 대수를 5대 이상 구축해야 한다.

국토부는 2월 말까지 향후 항공기 도입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플라이강원측에 요구했다. 이

를 토대로 면허 반납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면허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는 추가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한 운항장려금 60억원 중 36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 당장의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도는 2019~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운항장려금 명목으로 144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도관계자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플라이강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취득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강원도민일보

고성산불 한전 직원 2심도 무죄... “누군가는 책임져야” 반발

항소심서 ‘인재’ 아닌 ‘재해’로 재판부 “증거만으로 판단 어려워” 대책위 “가해자 없는 심판 모순” 손해배상금 소송 영향 우려도

속보=축구장 1700개 규모의 산림을 축 대밭으로 만든 2019년 고성 대형산불 사건(본지 2022년 4월 5일자 4면 등)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산불의 책임이 사실상 인재가 아닌 재해로 결론났다. 역대급 산림 피해가 발생했지만 어느 누구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서 피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3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피해보상 문제도 여전히 쟁점이다.

■ 90도 꺾인 전선 누구 책임인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전·현직 한전 직원들의 책임 여부다. 감사 결과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었고 전신주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로 이어졌다. 검찰은 데드엔드클립프(배전선로에 전선을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 하자를 방치했다며 한전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동해안에 매년부는 양

간지공을 고려할 때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전측은 항소심에서 산불이 전부터 전선이 90도로 꺾여있었다고 불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만약 그렇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가 전선의 90도 꺾임 현상과 단선은 무관하다'는 증언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선이 90도 꺾여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만약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책위 촉각 반발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남았지만 산불이 발생한지 4년만에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역대급 산림 피해를 낳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지지 않게 된 셈이다.

한운용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택분과위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가 없는 모순된 심판이며, 수많은 이재민들이 상처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수천명이 길바다에 나왔아서 아직도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김경혁 대책위원장은 “산불로 주민 2명이 사망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내용이 배제돼 강력하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 피해 보상에 영향 미칠까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피해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대책위가 한전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째 제 자리를 맴돌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이재민들은 회생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김 위원장은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지금 당장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살기 어려운 이재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로 899억원의 재산피해와 산림 1260ha가 잿더미가 됐고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본호

강원도민일보

'신경제·국제' 추상적,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재검토

전국 각 지자체 '경제' 내세워
특수성·차별화 없는 비전 지적
환경·생태 등 구체화 필요 제안
도, 의견수렴 주중 최종 확정

속보=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신경제 국제도시' (본지 1월8일자 9면)로 잠정 설정했으나 강원도의 특수성·차별성이 담겨있지 않고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확정안이 주목된다.

전국 각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628년 만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포괄적 개념이 아닌 강원도의 친환경적 생태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강원도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3일 마무리되는 '특례 과제 4개 권역별 도민공청회'를 끝으로 각 의견을 종합해 특례 발굴 확정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다수 광역·기초지자체가 '경제'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신경제', '국제'를 키워드로 한 강원특별자

치도 비전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규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신경제 국제도시라는 비전은 구체성이 결여된다"며 "이를테면 강원도 생명의 가치, 생활, 바이오, 환경, 자연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고 본다. 신경제 국제도시는 전달 메시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자치분권 전문가는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상황에서 과연, 신경제 국제도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떤 차별성과 특수성을 가질 것인가"라며 "자연과 생태, 준수도권으로서의 거점 역할 등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각 지자체가 경제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 등을 위해 신경제 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또 경기도정은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설정했고, 이를 토대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대도약 세계 5강 국가를 위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도가 특별자치도 비전 축의 하나로 '신경제'를 넣은 것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국제 학교 유치 등을 통해 강원도의 새로운 경제 부흥기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주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지은 정승환

江原日報

현 도청사 이궁·도관찰부 복원 계획 착수

도, 전북 전라감영 복원·충남 미술관 활용 사례 벤치마킹
김지사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사·문화 공간 고민"

강원도가 2028년까지 도청사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신축 이전하는 가운데 현 도청사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에도 본격시동을 걸었다. 국내외 도청사 신축 사례를 분석해 새로운 도청사의 콘셉트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달 말 도는 전북도청 옛 청사와 현 청사, 충남도청 등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을 벌인다. 옛 전북도청의 경우 신축사 신축 이전 후 104억원을 투입해 조선왕조 500년간 전라도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을 복원했다. 복원 이후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6만~7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강원도가 도청사 이전 후 현 청사 부지에 강원도관찰부와 고종황제의 궁궐인 춘천이궁 등을 복원하려는 계획과 유사하다.

충남도청의 경우 홍성군으로 신축 이전한 후 대전에 있던 기존 도청사를 미술관으로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현 도청사 본관을 복합예술·전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도는 올 2월에는 동내면 행정신도시 건설에 참고하기 위

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의 계획도시를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현 청사건립과 옛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투트랙으로 동시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18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역시 새 청사 건립만큼 옛 청사 활용방안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청사에 미술관, 춘천이궁 복원과 함께 미디어아트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며 "(현 도청이)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강릉시 외항선 취항 목표 옥계항 개발 착수

**컨테이너 취급 인프라 확충 계획
증설·국가항 전환 정부 설득 총력
세관 등 설치 관계기관 협의나서**

강릉 옥계항만 개발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릉시는 민선8기 '해양실 크로드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올 상반기 컨테이너 외항 정기선 취항 및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설치 목표포 옥계항만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정적인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화력 발전소(영동예코발전, 강릉예코발전)의 친환경 연료로 사용되는 우드펠릿의 연간 최대 수입량 120t 가운데 일부를 옥계항 컨테이너 화물로 취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체 등과 협의에 나선다.

또 석탄 부두에서 컨테이너 취급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로 옥계항 일부 선석(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게 되는 장소)의 기능을 변경하고, 컨테이너 야적장 확보 및 항내 구획 정리 등을

통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옥계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과 항만 증설(10선석, 10만t급 접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5년에 실시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024년 강릉~부산선, 2025년 강릉~인천선, 2027년 수서~강릉선과 동해북부선(강릉~고성제진) 등 사동팔달 광역교통망과 옥계항만을 연계하면 지역 산업단지 내 수출입 컨테이너 통관 및 물류를 옥

계항에서 윈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91년 조성된 옥계항이 시멘트 생산과 수출입에 필요한 벌크화물만 취급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라며 "항만 증설을 통한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국가항이 되면 물류비 절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흥규 시장은 옥계항만 개발과 관련해 14일 오전 10시 옥계항을 방문한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인구 4만명 붕괴 태백시 학생수 감소 현실화

**초교학생 수 전년비 154명 줄어
인구 1416명 감소 학교준립 위기
황지초 등 일부 편중현상도 심화**

지난해 인구 4만명선이 붕괴된 태백시의 인구감소가 각급 학교 신입생 감소로 나타나는 등 학교 준립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입학에 대해 편법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등 지역내 교육권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성)

의 2023학년도 확정학급 편성현황을 보면 초교의 경우 신입생을 포함한 전체학생의 수가 지난해보다 4개 학급에 154명이 줄었다. 이와 함께 올해 초교에 취학하는 신입생 216명 중 121명이 황지초교로 입학하는 등 일부 학교 편중현상도 여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중학교 진학으로도 이어져 올해 태백지역 초교를 졸업한 학생 351명 중 타지역 진학생 2명을 제외한 308명이 황지지역 중학교로 진학해 32명이 진학한 장성지구와 9명이 진학한 철암지구와 비교해 극심한 지역 편중 현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을 이용해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을 실시했다. 이날 추첨 배정은 교육장과 학교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는 학부모 대표 3명, 학교 전담 경찰관 1명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해 공개 추첨으로 진행했다.

이날 추첨은 지역 중학교 전체 배정 대상자 349명 중 체육특기자 10명과 지역선배정 29명, 유공자녀 2명, 다자녀 가정 자녀 46명, 기초생활수급자 5명, 특수교육대상자 7명 등 99명을 선배정한 뒤 나머지 250명에 대해 추첨·무추첨 방식으로 진행했다.

추첨결과 태백중과 철암중 등 단일 학교가 있는 장성지구와 철암지구의 학생들은 전원 해당 학교에 배정했

며 복수의 학교가 있는 황지지구는 추첨을 통해 상장중 70명, 세연중 84명, 함태중 70명, 황지중 84명을 각각 배정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학령인구 자체가 줄어 신입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의 일부 지역 편중 현상은 주거지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지역 거주 인구는 지난 2022년 12월 말 현재 3만 9428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416명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안의호 eunsol@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1 12 ()
/ 19

공공기관 이전, 원도심 희생 계기로

-주요 기관 외곽 이동 침체 가속화, 활로 찾아야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각 지역은 기관 추가 유치 타당성 논리 개발과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하고, 이전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TF팀을 구성해 활동을 벌이는 등 경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과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활력을 잃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열린 '2023 강원특별자치도 원년비전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꼽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시대적 요구를 강조했습니다. 도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월 중 32개 우선 유치 대상 기관을 토대로 최우선 유치대상을 선정하는 등 세부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과 추가 이전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원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을 구성, 기관별 특성과 선호 요인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특징은 원도심 활성화에 있습니다. 수도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신도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도심 중심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빅3 도시를 비롯해 도내 상당수 도시의 원도심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돼 상권이 분산되는 형국입니다. 또한 주요 기관들의 외곽 이전으로 경제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심은 침체일로에 처해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면서 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기존의 상권과 경제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 목표를 원도심 활성화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구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심 상권과 주거단지 주변 상가가 조화를 이뤄야 경제 기반이 튼튼해집니다. 중심지 공동화를 방지한다면 결국 국소규모 상권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게 돼 경제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 01 12 ()
/ 19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선택과 집중’ 내실 기해야

전국 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다.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은’ 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제기된다. 강원도가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사업 특례를 담은 181개 법 조항의 공개가 임박했다.

181개 조항에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 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례, 접경지·폐광지 등의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 행·재정 및 교육 특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밀한 논리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례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강원도가 11일부터 18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11일 오전에는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권, 오후 3시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13일 오전에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권, 오후에는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동해안권 공청회를 갖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취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좁은 면적으로 행정구역 전역이 특례의 수혜를 입었지

만 강원도는 다르다.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18개 시·군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영동·영서권 간의 차이는 물론 폐광·접경지역 등 특수한 생활권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권역별 별도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심에 특례가 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권한 이양과 조직, 인사, 재정 특례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핵심사항은 여전히 막혀 있다. 세종시 역시 중앙부처 이전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2020년 기준 인구나

GRDP는 전국 0.7%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미흡하다. 이제 막 시작하는 강원도 또한 미완의 상태다. 결국 세 특별자치도가 정착을 하는 데는 많

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간 특례를 비교해 공통점은 더욱 강화하고 미비점은 보완해야 한다.

그런 특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별 대응하는 것보다는 상호 연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별자치도가 많아져 특별할 게 없다는 것을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례와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는 보다 더 치밀해야 한다. 규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테면 상수원보호구역법, 수도법은 수도권에서 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답을 먼저 찾아야 한다.

산림·환경 등 181개 법 조항 곧 공개

실질적 효과 낼 수 있는 것으로 우선순위 정해

규제 완화 요구, 더욱 치밀한 논리가 중요